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사업유형 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The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ject Type Selection of Elderly Job Creation Project Implementation Institutions in Local Government

김 이 수*

Kim, Lee-Soo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모형
- IV. 분석결과
- V. 결 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수행기관에 참여, 어르신들의 보수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은 불완전경쟁시장 등 준시장 실패(quasi-market failure)와 할당량 등 제도적 인센티브 측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선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인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담기관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선호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선호동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13. 7. 1, 심사기간(1,2차): 2013. 7. 1 ~ 2013. 8. 16, 게재확정일: 2013. 8. 16

기, 역할유형, 기관유형, 지역수준을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다항로짓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수준, 선호동기, 기관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역할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서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임의적 편의경향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과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선호유형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is creating elderly job by government-funded in local government. It has quasi-market failure, insufficient incentive system. Nevertheless, social service delivery institutions are trying to participate in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If so, why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delivery institutions do participate in delivering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under an unfavorable environment? This purpose of article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and project selection of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delivery institutions. I gave an outline of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reviewed social service provider factors as theoretical basis and categorized determinant factors of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selection into motivations, roles, institutions type, region type. Analysis results say that factors such as motivations, roles, region type are determinant in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participation, but institutions type are not ineffective.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must prevent cream-skimming or moral hazard of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delivery institutions, facilitate networking in between program delivery institutions, evaluate differentiated programs and expertise.

□ Keywords: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implementation institutions,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type selection, elderly job placement program

I. 서론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및 계약범위가 점점 확장됨에 따라 비영리조직들은 사회적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수혜집단들은 서비스 전달에 있어 비영리조직의 역할과 연계된다. 지방정부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은 더 증가한다. 이중 비영리조직들이 적극적인 영역은 노인서비스 전달 영역이다. 노인서비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계약된 사회서비스 분야이고 공급기관들간 변동이 큰 영역이다(Van Slyke, 2002). 이러한 노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분야이다. 고령화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등 일정한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노인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수행기관에 참여, 어르신들의 보수 및 부대비 용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남기철(2012)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첫째, 노인 인구의 증가,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들이 근로를 포함한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 등을 비롯한 고령자의 복지증진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 둘째, 사회전체적으로 인구구성상 고령층의 사회적 활동능력의 발휘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 셋째,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보다 훨씬 우수한 인력이 고령층에 편입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을 둘러싼 문제점들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기철(2012)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들로는 욕구대비 사업량 불충분성, 노인 욕구와 사업내용(유형)의 불일치, 좋은 일자리로서의 품질 부족, 인프라의 내용적 취약성,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 결여, 양적 사업목표 치중에 따른 후속관리의 취약성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원시연(2012)에 의하면, 현재의 노인일자리 추진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 차별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기관들이 동시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간 불필요한 견제와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 고찰,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만족도 분석 등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행태를 다루었지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행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드물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불완전경쟁시장 등 준시장 실패(quasi-market failure)와 유인동기(incentives)의 결여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임의적 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들의 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현재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단순히 하위유형별 효과성만을 평가하거나 참여유형별로 주관적인 만족이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체계, 특히 전담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의적 선택(cream-skimming) 등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사업유형 선택행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인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사업유형 선택요인을 연구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서비스로서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수행기관에 참여, 어르신의 보수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2).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첫째,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둘째,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셋째, 은퇴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공익형으로서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유형으로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 지자체 고유 업무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지자체

의 행정비용 절감,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문제 예방 및 완화 등에 도움 제공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둘째, 교육형으로서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유형으로서 노인인적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참여노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셋째, 복지형으로서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유형으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 도모,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정서적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넷째, 인력파견형으로서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유형으로서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높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파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된 시장 진입형(민간분야) 일자리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다섯째, 시장형으로서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유형으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는데,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 충족, 점진적으로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표 1> 노인일자리사업유형 비교

유형	정의	목적	일자리유형	추진체계
사회공헌형	공익형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 지자체 고유 업무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문제 예방 및 완화 등에 도움 제공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친환경 EM활용사업	지자체 중심
	교육형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인적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참여노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 제공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체육 건강 강사파견사업, 숲생태해설사업 등

유형	정의	목적	일자리유형	추진체계
복지형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 도모,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정서적 안정 도모 등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등	재가노인시설 중심
시장진입형	인력파견형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높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파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된 민간분야 일자리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등	시니어클럽 중심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 충족, 점진적으로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 마련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 사업 등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 원시연(2012)

2.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서비스공급 영향요인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종종 고객을 다루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야 할 부가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는 첫째, 다양한 수준으로 다루기 쉽거나 다루기 어려운 고객문제, 둘째, 장기간에 특화된 처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차별화된 수준의 동기를 가진 고객, 셋째, 경쟁수준이 차이가 나는 시장, 넷째, 프로그램 개발 및 집행을 위한 시간 및 자금의 제약을 가진 입법적으로 규정된 서비스, 다섯째, 애매모호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사업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 공급기관의 유형은 서비스의 효과성과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김인, 2009). 서비스전달의 효과성은 시민참여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데(Potapchuck et al., 1998), 시민참여는 사회적 딜레마를 피할 수 있다. 이는 개인선호도가 상호작용적 대화와 참여과정을 통해 점점

사회화가 되기 때문이다(Lowery, 2000; Sager, 2002). 그리고 공공재의 공적 공급은 재화의 특성보다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행태(behavior of the interests)와 관련이 있다(Zerbe and McCurdy, 1999:567).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은 단순한 정보 부족 이상의 선호를 조작하는데(Lowery, 2000), 이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시장광고와 정보 통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선호와 소비자의 선호를 조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준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아닌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특정 사업에 참여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사업참여 선호, 즉 사회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관의 선호동기(motivation) 요인이다. 공공서비스, 특히 사회서비스를 외부행위자와 계약하거나 내부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가 여부는 공공조직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약점은 서비스 계약 및 계약과정을 관리할 정책 및 프로그램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Kelman 2002a; Meyers, Glaser, and MacDonald, 1998; Milward and Provan, 2000; Romzek and Johnston, 2002; Smith and Smyth, 1996; Van Slyke, 2003). 이에 따라 민간기관, 특히 비영리조직과 사회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서비스 동기는 사회서비스 사업유형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서비스 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거나 사회 복지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공공영역에서의 동기(motives)와 행위(action)를 의미한다(Perry and Hondeghem 2008a:3). Perry and Wise(1990)는 공공서비스 동기를 공공기관이나 조직에 토대를 둔 동기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성향으로 규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여러 학자들이 공공서비스 동기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공동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타적 동기(Rainey and Steinbauer, 1999:23), 공공재 봉사와 관계된 동기(Perry and Hondehem, 2008b, 3)로 규정하였다. 최근에는 공공서비스 동기가 사적 영역에 적용된다(Steen, 2008).

공공서비스 동기는 조직이 개인들의 공공서비스 가치를 공유하거나 종업원들이 조직의 공공서비스 가치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Bright 2008; Pandey, Wright and Moynihan, 2008; Steijn, 2008; Taylor, 2008; Wright and Pandey, 2010). 공공서비스 동기는 내부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임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Pandey, Wright, and Moynihan, 2008; Wright and Pandey, 2010), 그들의 개인적 가치와 조직의 가치와 일치시키는데 기여한다(Bright, 2008; Wright and Pandey, 2008). 최근 더 높은 공공서비스 동기를 가진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공공조직을 선호하고 있다(Vandenabeele, 2008). 이는 공공조직의 임무, 관행, 명성의 차이

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조직의 동기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Barker, 1993:28).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s)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연대감, 동정심, 불편한 자들에 대한 희망 및 위업 등을 포함한다.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es)로서 새로운 경험과 기술의 획득, 여가시간에 가치있는 일의 수행, 개인적 만족 등을 포함한다. 도덕적 동기(obligation motives)로서 도덕적, 종교적 의무, 지방공동체에 기여, 사회체무의 상환 등을 포함한다.

둘째, 기관의 역할(role) 유형이다.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계약관계는 비영리조직의 운영절차를 변경시키고, 임무의 표류와 직원들의 탈전문화를 초래하며, 정부의존성을 강화시킨다(Alexander, Nank, and Stiffers, 1999; Kramer, 1994; Saidel, 1991). 기관의 역할은 서비스의 특성(service characteristics) 및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s)과 관련된다.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집행과정에서 공공관리자의 재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공공관리자의 순수한 책임성 문제를 제기시켜 정책목표, 집행절차간 불일치(divergence)로 연결된다(Meyers, Riccucci, and Lurie, 2001; Sandfort, 2000).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외부계약은 1차적으로 서비스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즉 서비스의 특성으로는 특수한 물리적 인프라 및 기술적 전문성의 수준, 계약의 특화 및 모니터링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역할은 거래비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서비스 전달유형을 평가하는데 있어 거래비용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tein, 1990). 거래비용은 정부의 계약결정선택을 설명하는데 활용된다(Nelson, 1997; Sclar, 2000; Zerbe and McCurdy, 1999). 이는 공공관료제내 경쟁의 부족 때문에 정치적 지대, 예산극대화 행태, 일시적 인센티브 등으로 인하여 관료제 내 서비스 공급비용은 민간조직과의 계약과정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Eggers and O'Leary, 1995; Osborne and Plastrick, 1997; Megginson and Netter, 2001; Savas, 1987).

셋째, 기관유형이다. 임의적 선호행태(cream skimming)는 모든 조직에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기관의 유형이나 소유구조에 따라 다르다. 기관의 유형은 기관의 소유구조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관유형은 서비스전달로부터 이익(수익, 혁신, 효율성 등)을 얻는 행위자를 결정한다. 특히 비영리조직은 개인화된 서비스, 소규모, 공동통제 등의 강점을 지니므로 정부수요에 잘 대응할 경우 비영리조직 공급자에 관한 정부의 선택가능성은 크다(Salamon, 1987). 즉 정부는 관리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서비스를 계약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공동관리 영역(지역사회와의 공동책임)으로 전가시킨다(Eggleston and Zeckhauser, 2002; Stein, 1990). 민간기관은 수익증가에서 효율성의 편익을 포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혁신할 인센티브를 지니지만, 또한 서비스의 질을 희생하여 비용을 축소시키려고 한다(Hart et al., 1997). 반면에 비영리조직의 소유자들은 혁신에 관한 더

낮은 유인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 더 높은 유인기제를 가진다(Hansmann, 1987, 1996). 반면에 일부 연구에서는 경쟁적 공급 및 모니터링이 소유구조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Domberger and Rimmer, 1994).

넷째, 지역(region) 요인이다. 선행연구들(Hirsch, 1995a; Joassart-Marcelli and Musso, 2005; Kodrzycki, 1994; Warner, 2009; Warner and Hefetz, 2003)에 의하면, 외부위탁(서비스계약) 선택은 도시의 위상에 따라 명백히 다르다. 시골지역은 빈약한 시장으로 고통을 받는다(Johnston and Romzek, 1999; Warner, 2009; Warner and Hefetz, 2003). 반면에 도시는 시민들의 이해이질성이 더 클수록 분절화된 지방정부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Briffault, 2000; Frug, 1999; Lowery, 2000) 지리적 시장(도시, 시골, 준도시 등)에서 경쟁 및 서비스 유형의 부족은 서비스공급측면의 불완전성을 교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관리전략으로서 재입찰을 제한시킨다(DeHoog, 1984; Johnston and Romzek, 1999).

3.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복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시된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에 관한 연구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고찰한 연구들은 주로 정부 및 노인인력개발원의 전문가포럼 발제 및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출간된 문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남기철(2007)은 참여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과의 연계, 전반적인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의 연관성, 일자리사업 내부의 적합성 등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지난 5년을 평가하며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 남기철·이문국·조성은·강성추·조준행(2008)의 연구 역시 욕구맞춤형 일자리사업 지향,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질적 수준제고를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도입을 통한 복지인프라의 개편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변재관(2007)은 참여정부의 일자리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전문교육의 확대, 일자리사업의 규모 확대 및 사업구조 개편, 민간분야의 일자리 확충,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사업과의 결합, 관련 인프라의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주문하였다. 이환범(2010)은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관적 효과성 평가 및 객관적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 자발적 노동기회의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규정 현실화,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확보, 자립지원형 일자리 개발을 통한 시장주도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타당성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는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가 참여노인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들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는 형태의 연구논문들이다. 서양열(2004)은 전라도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참여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노인들이 전체적인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소득수준에는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동배·유병선·정규형(2012)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교육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교육만족도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규영·박공식(2007)은 각 사업유형별 만족도와 참여수준, 효과성 등의 차이에 주목하였는데, 노인일자리사업중 시장형과 교육형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성과지표들이 더 높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이 더 높고, 공익형에 비해 복지형과 교육형의 안녕감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중수·김옥희(2010)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유형이나 참여기간 등에 따라 참여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다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형과 시장형이 공익형과 복지형에 비해 정신건강 개선효과가 높으며, 참여기간이 길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김준환(2010)은 인구사회적 특성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각 유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에 따른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만족도와 효과성은 공공분야 유형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높은 반면 민간분야인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석원·임재영(2007)은 고령자의 취업은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지연시켜 연금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을 연장시켜 연금재정 부담을 이중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고용을 통한 자립적 노후생활로 인해 사회보장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은구(2009)와 임재영·이석원(2008)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부분 의료비 절감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석원(2009)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조사하여 일상적인 활동량 증가 등으로 일자리는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영선·강은나(2011)는 노인일자리사업

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노인의 건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참여 노인과 비참여노인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권치영·김선웅·임중철·이홍직(2007)의 연구는 노인일자리 참여가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김진곤(2009)은 노인의 수명이 급속도로 연장됨에 따라 여전히 근로능력을 구비한 존재로서 경제활동 참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여, 이들이 장기간 근로하면서 축적한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게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의수·강수영(2008)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생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부양 부담을 축소시키고 노인을 범사회적 생산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장유미(2012)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 중 신뢰 형성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사회적 지지 중 물질적 지지가 관계망과 사회참여에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소정(2013)은 노인일자리사업이 갖는 사회관계 효과와 이를 통한 삶의 질 증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비공식적 사회관계보다 공식적 사회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주관적 친구이웃관계와 친구이웃 상호작용 변인 등의 사회관계 변수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삶의 질을 매개하는 변인들임을 발견했다.

허준수(2012)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 간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족형태,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은정(2012)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잠식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초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를 일정부분 잠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원봉사 전체 지형을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중복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이행률이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직무만족도를 중심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김옥·원영희(2008)는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가

보통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봉급과 근로조건, 자기계발기회, 슈퍼비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을 지적하였다. 김욱·원영희·박준기(2011)는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관련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관련 요인 중 보상과 운영합리성 순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순·박영란(2010)은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은 자신감이 높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노인의 일과 사회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실무자가 속한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박영란·손덕순(2010)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의 성역할태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의 성역할태도는 실무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성별과 연령이 실무자들의 성역할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인일자리 선행연구(요약)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 고찰	남기철(2007)	참여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평가. 기존 소득보장정책과의 연계, 전반적인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의 연관성, 일자리사업 내부의 적합성 등에 대한 쟁점 검토
	남기철 외(2008)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육구맞춤형 일자리사업 지향,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질적 수준제고 제안. 사례관리 도입을 통한 복지인프라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
	변재관(2007)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전문교육 확대, 일자리 사업의 규모 확대 및 사업구조 개편, 민간분야의 일자리 확충,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과의 결합,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제시
	이환범(2010)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관적 효과성 평가 및 객관적 효과성 평가를 실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서양열(2004)	전라도지역 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참여만족도 조사. 전체적으로는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나, 소득수준은 불만족이라는 점을 지적
	이석원 외(2007)	고령자의 취업은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지연시켜 연금재정 부담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부족문제를 완화하여 사회보장 지출의 절감효과를 창출
	김동배외 2인(2012)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교육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
	권규영·박곡식(2007)	각 사업유형별 만족도와 참여수준, 효과성 등의 차이에 주목하여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삶의 질 비교
	김준환(2010)	인구사회적 특성과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에 따른 만족도, 효과성 분석
	강종수·김옥희(2010)	일자리 유형이나 참여기간 등에 따라 참여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다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참여기간이 길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음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지은구(2009), 임재영·이석원(2008)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료비 절감효과 분석-2004년부터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제시
	이석원(2009)	일자리 참여자의 노동이 일상적인 활동량 증가 등 노인에게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함
	김영선의(2011)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 평가
	권치영 외(2007)	노인일자리 참여가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
	김진곤(2009)	노인의 수명연장에 주목하여 노령인구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게 노동시장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주장
	장유미(20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
	초의수·강수영(2008)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부양부담을 축소하고 노인을 사회적 생산의 대열에 참여하게 함
	이소정(2013)	노인일자리사업이 갖는 경제적 효과 및 건강 관련 효과 이외에도 사회관계 효과와 삶의 질 증진 효과 분석
	허준수(2012)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자아효능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경제적 관련 특성 등의 영향요인 분석
	지은정(2012)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참석관계를 분석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만족도 분석	김옥·원영희(2008)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은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와 봉급, 근로조건, 자기계발기회, 슈퍼비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김옥외 2인(2011)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관련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박경순·박영란(2010)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무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구조의 특성 고찰
	박영란·손덕순(2010)	노인일자리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의 성역할태도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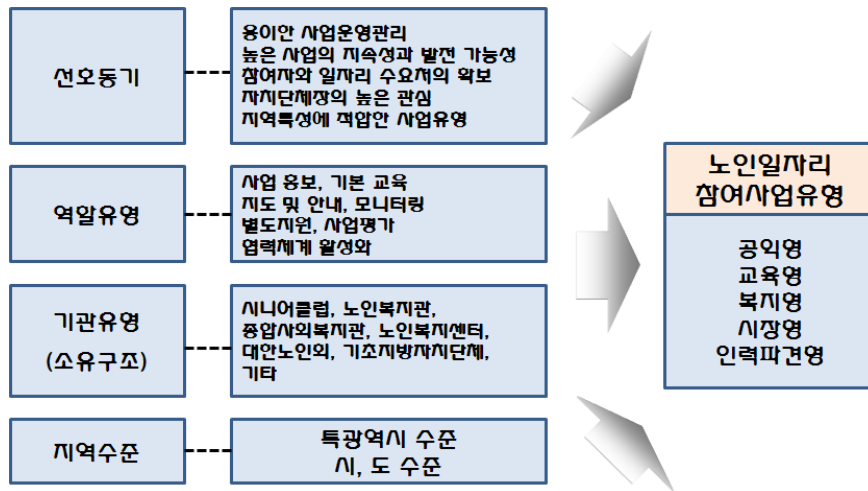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1. 분석 틀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담기관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유형

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문헌검토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담기관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선호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호동기, 역할유형, 기관유형, 지역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 틀



2. 변수 및 측정지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유형이다. 측정지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선호동기, 역할유형, 기관유형, 지역수준으로 구분한다. 노인일자리 선호동기는 용이한 사업운영관리, 높은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 용이한 참여자와 일자리 수요자의 확보,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유형으로, 역할유형은 사업 홍보, 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시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 실시, 초기 사업 정착 과정 지도 및 안내, 정기 지도방문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사업추진 상황 및 진행도 파악 후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도와 만족도 등 사업평가, 시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로, 기관유형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기초지방자치단체, 기타로, 지역수준은 시·도, 특별·광역시 차원으로 분류한다.

〈표 3〉 본 연구의 변수 및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비고
독립 변수	선호동기	0=용이한 사업운영관리, 1=높은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 2=용이한 참여자와 일자리 수요처의 확보 3=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 4=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유형	더미 변수
	역할유형	0=사업 홍보 1=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 실시 2=초기 사업 정착 과정 지도 및 안내 3=정기 지도방문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4=사업추진 상황 및 진행도 파악 후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5=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도와 만족도 등 사업평가 6=시너지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	
	기관유형	0=시니어클럽, 1=노인복지관, 2=종합사회복지관, 3=노인복지센터 4=대한노인회, 5=기초지방자치단체, 6=기타	
	지역수준	0=시·도 차원, 1=특별·광역시 차원	
종속 변수	참여사업유형	0=공익형, 1=교육형, 2=복지형, 3=시장형, 4=인력파견형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1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출하였는데, 분석대상은 776개 기관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유형의 경우 공익형(40.1%)이 가장 많고, 복지형(33.9%), 교육형(13.8%), 시장형(10.6%), 인력파견형(1.7%)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동기의 경우,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유형(35.7%),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가능성(33.4%)을 중시하였고, 참여자와 일자리 수요처의 확보 용이(18.6%), 사업운영관리 용이(10.8%), 자치단체장의 관심(1.5%) 순으로 나타났다. 역할유형의 경우, 정기 지도방문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28.7%), 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도와 만족도 등 사업평가(20.7%), 초기 사업 정착 과정 지도 및 안내(14.0%), 시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12.1%), 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시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실시(10.7%), 사업홍보(7.1%), 사업추진 상황 및 진행도 파악 후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6.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기관유형의 경우, 대한노인회(22.2%), 노인복지관(19.1%), 종합사회복지관(16.8%), 기초지방자치단체(15.5%), 노인복지센터(14.2%), 시니어클럽(7.9%), 기타(4.5%)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61.7%)가 특별시 및 광역시(38.3%)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선호동기를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익형의 경우 지역특성에 사업부합(32.5%), 사업수요처 확보 용이(28.6%) 때문에, 교육형은 사업의 지속성 및 발전가능성(59.8%), 복지형은 지역특성에 사업부합(48.7%), 시장형은 사업의 지속성 및 발전가능성(70.7%), 인력파견형은 지역특성에 사업부합(46.2%)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익형의 경우 주로 지도방문점검을 통한 모니터링(29.6%)을, 교육형의 경우 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도와 만족도 등 사업평가(25.2%)를, 복지형의 경우 지도방문점검을 통한 모니터링(34.6%)을, 시장형의 경우 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도와 만족도 등 사업평가(29.3%)를, 인력파견형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30.8%)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유형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익형의 경우 주로 대한노인회(36.3%)와 기초지방자치단체(28.3%), 교육형의 경우 노인복지관(51.4%), 복지형의 경우 노인복지센터(36.5%), 시장형의 경우 시니어클럽(47.6%), 인력파견형의 경우 대한노인회(23.1%)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사업유형별로 지역차원에서 살펴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모두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분석모형의 종속변수, 즉 사업유형과 관련된 5가지 사업영역 유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공익형 사업영역에 참여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선택과 관련된 범주집단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분석모형의 적합도 수준과 함께 분석모형에 설정된 독립변수의 종합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한 우도비 검증(Likelihood Ratio Tests)을 실시하고, 종속변수인 사업 유형선택과 관련해서 공익형을 준거로 하여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선택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성 평가 및 우도비 검증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선택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성(fitness)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의 추가 없이 절편만 있는 기저모형(null model)과 분석모형 간 -2Log 우도의 차이값에 대한 카이제곱 값은 629.898로서 유의도 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모형 적합 정보

모형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증		
	AIC	BIC	-2 로그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만	1538.896	1557.512	1530.896			
최종모형	1044.998	1380.097	900.998	629.898	68	.000

그리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종합효과를 검증하는 우도비 검증 분석결과, 지역수준, 선호동기, 기관유형 변수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역할유형 변수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에 대한 우도비 검증 결과

효과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증		
	축소모형의 AIC	축소모형의 BIC	축소모형의 -2Log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1044.998	1380.097	900.998	.000	0	.
선호동기	1144.103	1404.736	1032.103	131.105	16	.000
역할유형	1020.185	1243.584	924.185	23.187	24	.509
기관유형	1405.287	1628.687	1309.287	408.289	24	.000
지역수준	1047.840	1364.322	911.840	10.842	4	.028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선택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집단 간 특성 비교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을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선호하는 지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공익형을 선호하는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익형과 교육형, 공익형과 복지형, 공익형과 시장형, 공익형과 인력과건형을 선호하는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각 집단간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첫째, '교육형'과 '공익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수준 요인에서는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형과 공익형 모두 지역의 경쟁 및 서비스 유형 측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역할유형 요인에서는 정기 지도방문·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역할(-)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형과 공익형의 핵심담당기관의 특성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익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교육형은 주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공익형보다 교육형이 정기 지도방문·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은 교육형보다 공익형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선호동기 요인에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만 교육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형과 공익형의 대상과 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익형은 주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교육형은 전문성을 갖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익형보다 교육형이 더 사업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유형 요인에서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등이 교육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형과 공익형의 대상과 목적에서 초래되는 전문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익형은 주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유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에 교육형은 전문성을 갖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유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중요해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복지형'과 '공익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수준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복지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복지형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가노인

시설중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공익형은 지자체 고유 업무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지형은 상대적으로 공익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질적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역할유형 요인에서는 초기 사업 정착 과정 지도 및 안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복지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복지형과 공익형의 핵심담당기관의 특성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익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복지형은 주로 재가노인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공익형보다 복지형이 초기 사업 정착 과정 지도 및 안내 등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은 복지형보다 공익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선호동기 요인에서는 사업운영·관리가 용이(-), 참여자와 일자리 수요처 확보 용이(-)만 복지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복지형과 공익형의 대상과 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익형은 주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복지형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지형보다 공익형이 사업운영·관리와 참여자와 일자리 수요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기관유형 요인에서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기타(+)가 복지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복지형과 공익형의 대상과 목적에서 초래되는 전문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익형은 주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유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에 복지형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추구하는 일자리 유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중요해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셋째, '시장형'과 '공익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수준 요인은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익형보다 민간중심의 시장형이 경쟁이 더 치열하고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은 각 지역이 시장형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경쟁 및 서비스 수준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된다. 역할유형 요인에서는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형과 공익형의 핵심담당기관의 특성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익형과 시장형 전담기관들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선호동기 요인에서는 사업운영·관리가 용이(-),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 높음(+)만 시장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형과 공익형의 대상과 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익형은 주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시장형은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공익형보다 시장형이 더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사업운영·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된다. 기관유형 요인에서는 시니어클럽(+)만 시장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형과 공익형의 대상과 목적에서 초래되는 전문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익형은 주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유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에 시장형은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유형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중요해 전문성이 높은 시니어클럽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넷째, '인력과전형'과 '공익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수준 요인은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익형보다 민간중심의 인력과전형이 경쟁이 더 치열하고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은 시장형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이 민간과전형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경쟁 및 서비스 수준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된다. 역할유형 요인에서도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과전형은 시니어클럽이 주도하는 반면에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등 핵심담당기관의 특성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익형과 민간과전형 전담기관들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선호동기 요인에서도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익형이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문제 예방 및 완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민간과전형은 안정된 민간분야 일자리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등 추진목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은 다른 유형의 일자리와 달리 민간과전형은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과전 등의 사후관리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차별화된 선호동기를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반면 기관유형 요인에서는 시니어클럽(+)만 인력과전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민간과전형과 공익형의 대상과 목적에서 초래되는 전문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익형은 주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유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에 민간과전형은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높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들중 수요처의 요구

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과건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일자리 유형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중요해 전문성이 높은 시니어클럽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6>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선택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공익형과의 비교분석

절편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B	p값	B	p값	B	p값	B	p값
		-2.233	.000	-1.742	.000	-2.074	.000	-3.612	.002
선호 동기	A	-.659	.159	-1.686	.000	-2.571	.021	-1.423	.230
	B	1.403	.000	.107	.683	1.961	.000	.792	.240
	C	-.781	.087	-.822	.004	-1.073	.076	-17.750	.996
	D	-16.903	.996	-.310	.710	1.551	.081	-17.829	.
	E	0b	.	0b	.	0b	.	0b	.
역할 유형	A	-.498	.428	-.647	.209	-.391	.585	-.956	.450
	B	-.339	.546	-.561	.214	-.296	.670	-.789	.528
	C	-.664	.177	-1.061	.016	-1.029	.091	-1.135	.265
	D	-.993	.037	-.166	.654	-.335	.545	-.701	.445
	E	-.217	.728	-.319	.539	-.027	.970	-.813	.522
	F	-.378	.434	-.031	.937	-.055	.922	-1.732	.155
	G	0b	.	0b	.	0b	.	0b	.
기관 유형	A	1.483	.049	1.480	.042	3.326	.000	3.494	.000
	B	2.452	.000	2.134	.000	-.343	.557	-.074	.954
	C	1.095	.036	2.531	.000	-.239	.693	.247	.848
	D	.980	.279	4.750	.000	1.367	.059	-15.168	.997
	E	-.295	.572	.762	.053	-.867	.086	-.153	.874
	F	2.485	.000	1.554	.011	.167	.833	-16.725	.998
	G	0b	.	0b	.	0b	.	0b	.
지역 수준	A	.479	.083	.613	.006	.323	.335	1.448	.078
	B	0b	.	0b	.	0b	.	0b	.

주1(선호동기) : A(사업운영·관리 용이), B(사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 높음), C(참여자와 일자리 수요처 확보 용이), D(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음), E(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유형)

주2(역할유형) : A(사업 홍보), B(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시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 실시), C(초기 사업 정착 과정 지도, 안내), D(정기 지도방문·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E(사업추진 상황 및 진행도 파악 후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 지원), F(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도와 만족도 등 사업평가), G(시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

주3(기관유형) : A(시니어클럽), B(노인복지관), C(종합사회복지관), D(노인복지센터), E(대한노인회), F(기타: 취업지원센터 등), G(기초자치단체)

주4(지역수준) : A(특별시·광역시), B(시·도)

V.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사업유형선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조직의 선호동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유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익형을 준거로 할 경우 교육형은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복지형은 사업운영·관리 용이성과 참여자와 일자리 수요처 확보 용이성 측면에서, 시장형은 사업운영·관리 용이성과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반면에 민간과전형은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서비스 동기가 개인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 가치를 공유하거나 종업원들이 이러한 공공서비스 가치를 충족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들(Bright 2008; Pandey, Wright and Moynihan, 2008; Steijn, 2008; Taylor, 2008; Wright and Pandey, 2008, 2010)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동기에 따라 일자리사업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익형 일자리사업과 복지형 일자리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가능성보다는 사업수요처 확보가 용이하고 난이도가 낮은 일자리 유형을 선호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익형 등 공공일자리사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관련 예산이 전액 주어지는 반면에 민간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성과와 실적을 낼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수를 지역별로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항상 제공되는 일자리 수보다 신청자 수가 많아 해마다 100%를 넘는 실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등은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 이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원시연, 2012).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임의적 편의경향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손쉬운 일자리 선호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이도가 높은 일자리유형에 참여할수록 더 많은 일자리 할당량을 배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민간과전형을 주로 담당하는 시니어클럽의 경우는 기관의 법적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업무경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익형과 복지형, 교육형을 주로 담당하는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고유업무이외에 다른 업무가 추가되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원시

연, 2012). 또한 임의적 편의경향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사업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직의 역할(role) 유형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유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익형을 준거로 할 경우 교육형은 정기 지도 방문·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역할 측면에서, 복지형은 초기 사업 정착 과정 지도 및 안내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반면에 시장형과 민간파견형은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s and service characteristics)과 관련되는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기관의 임무에 부합하는 역할에 따라 일자리사업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관의 임무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거래비용이 축소되는데, 이는 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일자리사업을 선택할 경우 특수한 물리적 인프라 및 기술적 전문성의 수준, 계약의 특화 및 모니터링의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주로 지도방문 점검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나 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도 및 만족도 사업평가 등에 치중한 나머지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T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어플(app) 등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역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통합홈페이지와 어플 등을 통해 각 기관들의 현황, 업무, 역할, 소재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각 개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자원 등을 관련 기관들이나 지역사회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조직의 기관유형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유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익형을 준거로 할 경우 교육형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기관(교육센터 등) 측면에서, 복지형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기타(교육센터 등), 시장형과 민간파견형은 시니어클럽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관 등은 원래의 고유업무가 아닌 정부의 요청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도 노인일자리만 전담하여 기관내에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일을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과중이 발생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이며, 일자리전문기관으로 출발한 시니어클럽도 직원들의 대부분이 시장전문인력이 아닌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원시연, 2012).

게다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정부와의 계약관계에서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자금의 존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판단된다(Alexander, Nank, and Stiffers, 1999; Kramer, 1994; Saidel, 1991).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일자리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구비한 인력 구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형 일자리는 노인들이 해당 사업단에 소속되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소규모로 소품목을 생산하다보니 생산성이 낮고 지속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원시연, 2012), 우수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사업성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전담기관을 노인일자리 허브(hub) 기관으로 지정하여 허브 및 스포크(hub-spoke)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직의 입지, 즉 지역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유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익형을 준거로 할 경우 복지형을 제외하고는 교육형, 시장형, 민간과전형은 지역수준에서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구비율상 특별시, 광역시보다 일반 도 지역이 더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DeHoog, 1984, 1990; Johnston and Romzek, 1999)에서 나타나듯이 지역간 경쟁 및 다양한 서비스 유형의 부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별·광역시와 도 지역은 지역간 경쟁 및 다양한 서비스 유형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농촌이 많은 도 지역은 시장형 사업이 다소 강점으로서 모시송편 사업단 등 농촌의 먹거리를 매개로 한 일자리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 반면에 도시지역이 많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시장형보다는 폐지줍기 등 노동집약적인 공공형이 많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징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량에 비하여 사업수행 인 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조직관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더욱 다양하게 특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의 전문 멘토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조직관리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종수·김옥희. (2010).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 연구』, 48:279-298.
- 권구영·박공식. (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3):527-547.
- 권치영 외. (2007).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427-443.
- 김동배·유병선·정규형. (2012). 노인일자리사업의 교육만족도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3(2):267-293.
- 김옥·원영희. (2008).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 하위요인과 전반적 직무만족간의 관계 연구. 『사회복지정책』, 34:221-254.
- 김옥·원영희·박준기. (2011)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관련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305-332.
- 김 인(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3(4):127-151.
- 김영선·강은나. (2011) 노인일자리사업의 건강 효과성 분석 -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5(3):419-435.
- 김준환. (2010). 노인일자리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노인일자리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 20:147-194.
- 김진곤. (2009).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한국사회 정책』, 81-121
- 남기철. (2007). 참여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가. 『제9차 노인일자리전문가 포럼 자료』.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 남기철 외. (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남기철. (2012). 정부의 제2기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와 쟁점. 『노인인력개발포럼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경순·박영란. (2010).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0(4):1059-1075.
- 박영란·손덕순. (2010).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들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2:129-149.
- 변재관. (2007). 차기정부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제9차 노인일자리전문가 포럼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서양열. (200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31-51

- 원시연. (2012).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과제. 서울 : 국회 입법조사처
- 원시연. (2012). 『노인복지법』상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입법영향분석. 서울 :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 이소정. (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9:331-355.
- 이석원·임재영. (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연차별 의료비 절감효과. 『한국행정학보』, 41(4):387-413
- 이석원. (20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시간활용 변화와 적극적 노년생활. 『노인복지연구』, 49:51-80.
- 이환범. (2010).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효과성 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11(4):81-100.
- 임재영·이석원. (2008).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료비 절감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4(1):75-102
- 장유미. (20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1(1):121-148.
- 지은정. (2012).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잠식관계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연구』, 43(4):31-62.
- 지은구. (2009). 노인 일자리사업 정착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 『사회과학논총』, 28(1):357-410.
- 초의수·강수영. (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 노인복지기관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3):153
- 허준수. (2012).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노인들의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4:89-128.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2012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2011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실태 조사』. 서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Alexander, Jennifer, Renee Nank, and Camilla Stivers. 1999. Implications of welfare reform: Do nonprofit survival strategies threaten civil societ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8:452-475.
- Barker, D. G. (1993) "Values and Volunteering," in J. D. Smith (ed.) *Volunteering in Europe*. London: Voluntary Action Research, Second Series, 2:10-31.
- Briffault, Richard. 2000. Localism and regionalism. *Buffalo Law Review*, 48:1-30.
- Bright, L. 2008. Does public service motivation really make a difference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of public employee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8:149-166.

- DeHoog, Ruth Hoogland. 1984. *Contracting Out for Human Services: Economic,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Domberger, Simon, and Stephen Rimmer. 1994. Competitive tendering and contracting in the public sector: 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1:439-453.
- Eggers, William D. & James O'Leary. 1995. *Revolution at the roots: Making our government smaller, better, and closer to home*. New York, The Free Press.
- Eggleston, Karen N., and Richard J. Zeckhauser. 2002. Government contracting for health care. In *Market based governance*, eds. John D. Donahue, Joseph S. Nye Jr., 29-65.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Frug, Gerald E. 1999. *City making: building communities without building wal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Hansmann, Henry. 1987. Economic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eds. Walter W. Powell and Richard Steinberg, 27-42. New Haven, CT: Yale Univ. Press.
- _____. 1996. The changing roles of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enterprise in education, health care, and other human services. In *Individual, and social responsibility: Child care, education, medical care, and long-term care in America*, ed. Victor R. Fuchs, 245-275.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rsch, Werner Z. 1995a. Contracting Out by Urban Governments—review. *Urban Affairs Review*, 30:458-472.
- _____. 1995b. Factors important in local governments' privatization decisions. *Urban Affairs Review*, 31:226-243.
- Joassart-Marcelli, Pascale, and Juliet Musso. 2005. Municipal service provision choices within a metropolitan area. *Urban Affairs Review*, 40:492-519.
- Johnston, Jocelyn M., and Barbara S. Romzek. 1999. Contracting and accountability in state medicaid reform: rhetoric, theories and rea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9:383-399.
- Kodrzycki, Yolanda K. 1994. Privatization of local public services: lessons for New England. *New England Economic Review*, May/June: 31-46.
- Kelman, Steven J. 2002a. Contracting. In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edited by Lester M. Salamon, 282-318. New York : Oxford

- University Press.
- Kramer, Ralph M. 1994. Voluntary Agencies and the Contract Culture: Dream or Nightmare?. *Social Service Review*, 68(1): 33-60.
- Lowery, David. 2000. A transactions costs model of metropolitan governance: allocation versus redistribution in urban America.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49-78.
- Meggison, William L., and Jeffrey M. Netter. 2001. From state to market: A survey of empirical studies on privatiz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321-89.
- Meyers, Marcia K., Bonnie Glaser, and Karin MacDonald. 1998. On the front lines of welfare delivery: Are workers implementing policy reform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7(1):1-22.
- Meyers, Marcia K., Norma M. Riccucci, and Irene Lurie. 2001. Achieving goal congruence in complex environments: The case of welfare reform.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1(2):165-202.
- Milward, H. Brinton, and Keith G. Provan. 2000. Governing the Hollow Stat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2): 359-380.
- Nelson, Michael A. 1997. Municipal government approaches to service delivery: An analysis from a transactions cost perspective. *Economic Inquiry*, 35(1): 82-96.
- Osborne, David E., and Peter Plastrick. 1997. *Banishing bureaucracy*. Reading, MA: Addison-Wesley.
- Perry, J. L., and A. Hondelghem. 2008a. Building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about public service motiva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3-12.
- _____. 2008b. Editors' introduction. In *Motivation in public management*, ed. J.L. Perry and A. Hondelghem, pp.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ndey, S. K., B. E. Wright, and D. P. Moynihan. 2008.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inter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esting a preliminary model.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89-108.
- Potapchuck, William, Jarle Crocker, and William Schechter. 1998. *The transformative power of governance*. Washington, DC: Program for Community Problem Solving.

- Rainey, H. G., and P. Steinbauer. 1999. Galloping elephants: Developing elements of a theory of effective government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1-32.
- Romzek, Barbara S., and Jocelyn M. Johnston. 2002. Effective contract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A preliminary mode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2:423-453.
- Sager, Tore. 2002. Democratic planning and social choice dilemmas: Prelude to institutional planning theory. Hampshire, UK: Ashgate.
- Sandfort, J. 2000. Moving beyond discretion and outcomes: Examining public management from the front lines of the welfare system.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729-756.
- Scar, Elliott. 2000. You don't always get what you pay for: The economics of privatiza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Saidel, Judith R. 1991. Resource Independ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genc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6): 543-553.
- Smith, Steven Rathgeb, and Judith Smyth. 1996. Contracting for services in a decentralized system.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6:277-296.
- Salamon, Lester M. 1987. Partners in public service: The scope and theory of government nonprofit relations.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ed. W. W. Powell, 99-17. New Haven, CT: Yale Univ. Press.
- Savas, E. Steven. 1987.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NJ: Chatham House Publishers.
- Steen, T. 2008. Not a government monopoly: The privat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s. In *Motivation in public management: The call of public service*, ed. J. L. Perry and A. Hondeghem, 203 - 212.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Steijn, Bram. 2008. Person-environment fit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13-27.
- Stein, Robert M. 1990. Urban alternatives: public and private markets in the provision of local services.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Taylor, J. 2008. Organizational influences,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work outcomes: An Australian study.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67-88.

- Vandenabeele, W. 2008. Government call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as an element in selecting government as an employer of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86(4):1089 - 1105.
- Van Slyke, David M. 2002. The Public Management Challenges of Contracting with Nonprofits for Social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5(4): 489 - 517.
- _____. 2003. The mythology of privatization in contracting for social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296-315.
- Warner, Mildred E. 2009. Civic government or market-based governance? The limits of privatization for rural local governments.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6:133-143.
- Warner, Mildred E., and Amir Hefetz. 2003. Rural-urban differences in privatization: limits to the competitive state.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1:703-718.
- Wright, B. E., and S. K. Pandey. 2011. Public organizations and mission valence: When does mission matter?. *Administration & Society*, 43(1):22-44.
- Zerbe, Richard O. Jr., and Howard E. McCurdy. 1999. The failure of market failur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8:558-578.

<부록 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현황

구분	세부항목	N
사업 유형	공익형	311(40.1%)
	교육형	107(13.8%)
	복지형	263(33.9%)
	시장형	82(10.6%)
	인력파견형	13(1.7%)
선호 동기	사업운영관리가 용이	84(10.8%)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다	259(33.4%)
	참여자와 일자리 수요처의 확보가 쉽다.	144(18.6%)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다	12(1.5%)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유형이다.	277(35.7%)
역할 유형	사업 홍보	55(7.1%)
	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시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 실시	83(10.7%)
	초기 사업 정착 과정 지도 및 안내	109(14.0%)
	정기 지도방문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223(28.7%)
	사업추진 상황 및 진행도 파악 후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51(6.6%)
	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도와 만족도 등 사업평가	161(20.7%)
	시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	94(12.1%)
기관 유형	시니어클럽	61(7.9%)
	노인복지관	148(19.1%)
	종합사회복지관	130(16.8%)
	노인복지센터	110(14.2%)
	대한노인회	172(22.2%)
	기타	35(4.5%)
	기초지방자치단체	120(15.5%)
광역 시도	시·도 차원	479(61.7%)
	특별시·광역시 차원	297(38.3%)
합계		776

<부록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사업유형별 선호동기

구분	선호이유				
	사업운영관리 용이	사업의 지속성 및 발전가능성	사업수요처확보 용이	자치단체장의 관심	지역특성에 사업부합
공익형	60(19.3%)	55(17.7%)	89(28.6%)	6(1.9%)	101(32.5%)
교육형	8(7.5%)	64(59.8%)	8(7.5%)	0(.0%)	27(25.2%)
복지형	14(5.3%)	76(28.9%)	42(16.0%)	3(1.1%)	128(48.7%)
시장형	1(1.2%)	58(70.7%)	5(6.1%)	3(3.7%)	15(18.3%)
인력파견형	1(7.7%)	6(46.2%)	0(.0%)	0(.0%)	6(46.2%)
전체	84(10.8%)	259(33.4%)	144(18.6%)	12(1.5%)	277(35.7%)

<부록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사업유형별 역할유형

구분	역할유형						
	사업홍보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의 기본교육	초기 사업 정착 과정 지도 및 안내	지도방문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 지원	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도와 만족도 등 사업평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활성화
공익형	24(7.7%)	36(11.6%)	54(17.4%)	92(29.6%)	23(7.4%)	49(15.8%)	33(10.6%)
교육형	7(6.5%)	11(10.3%)	19(17.8%)	22(20.6%)	7(6.5%)	27(25.2%)	14(13.1%)
복지형	15(5.7%)	30(11.4%)	22(8.4%)	91(34.6%)	14(5.3%)	60(22.8%)	31(11.8%)
시장형	8(9.8%)	5(6.1%)	12(14.6%)	15(18.3%)	6(7.3%)	24(29.3%)	12(14.6%)
인력파견형	1(7.7%)	1(7.7%)	2(15.4%)	3(23.1%)	1(7.7%)	1(7.7%)	4(30.8%)
전체	55(7.1%)	83(10.7%)	109(14.0%)	223(28.7%)	51(6.6%)	161(20.7%)	94(12.1%)

<부록 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사업유형별 수행기관유형

구분	기관유형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 사회복지관	노인 복지센터	대한노인회	기초 자치단체	기타
공익형	8(2.6%)	39(12.5%)	46(14.8%)	7(2.3%)	113(36.3%)	88(28.3%)	10(3.2%)
교육형	4(3.7%)	55(51.4%)	13(12.1%)	2(1.9%)	10(9.3%)	8(7.5%)	15(14.0%)
복지형	4(1.5%)	46(17.5%)	64(24.3%)	96(36.5%)	35(13.3%)	11(4.2%)	7(2.7%)
시장형	39(47.6%)	7(8.5%)	6(7.3%)	5(6.1%)	11(13.4%)	11(13.4%)	3(3.7%)
인력파견형	6(46.2%)	1(7.7%)	1(7.7%)	0(0.0%)	3(23.1%)	2(15.4%)	0(0.0%)
전체	61(7.9%)	148(19.1%)	130(16.8%)	110(14.2%)	172(22.2%)	120(15.5%)	35(4.5%)

<부록 5>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수준

	광역시도		전체
	시·도 차원	특별·광역시 차원	
공익형	185(59.5%)	126(40.5%)	311(100.0%)
교육형	65(60.7%)	42(39.3%)	107(100.0%)
복지형	166(63.1%)	97(36.9%)	263(100.0%)
시장형	52(63.4%)	30(36.6%)	82(100.0%)
인력파견형	11(84.6%)	2(15.4%)	13(100.0%)
전체	479(61.7%)	297(38.3%)	776(100.0%)